

현안과제연구

2010.10

위안화(RMB)자유거래구역 지정제도 실행방안

연구수행 : 신동호



위안화(RMB)자유거래구역 지정제도 실행방안

목 차

I. 서론	1
II. RMB 자유거래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법제검토	2
III. 해외사례	9
IV. RMB 자유거래제도의 효과	13
V. RMB 자유거래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	16

I. 서론

- 중국은 자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급속한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자국 내부에서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의 공용통화로 격상시켜 지역경제통합을 도모하고 교역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 이러한 중국정부의 '위안화 국제화'는 결제통화→지역통화→기축통화의 순으로 단계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물론 중·단기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美달러화 지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중국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안화의 위상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존의 美 달러와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등 다양한 국제통화 거래의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구체적으로 우리경제도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제한된 지역내에서 시험적으로 위안화의 거래를 자유화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위안화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전제로 '위안화 자유거래'를 통해 한·중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임
- 나아가 외환의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한·중간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현재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여건이 열악한 경제자유구역에 위안화 거래가 시범적으로 운용될 경우, 해당지역의 투자 매력도는 크게 향상될 것임
-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우선 외환거래 관련 법제 및 외환자유화 추진계획,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령상 위안화 업무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살펴봄
- 다음으로 기존 기축통화 이외의 '통화국제화사례'와 위안화 자유거래에 따른 긍·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검토함
-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위안화 자유거래 시범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RMB 자유거래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법제 검토

1. 외환거래 관련 법규

① 기본법규

■ 외환거래법(1998.9.6제정, 1999.4.1시행, 법률 제5540호)

- 외환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으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이하에서 규정
 - 동 법은 외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외환거래법 시행령(1999.3.30제정, 외환거래규정 1999.3.31.제정)

- 외환거래법의 내용을 구체화
 - 외환거래의 유동적 성질에 대비하고 가변적인 국내 경제정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만으로 '법률' 개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

② 관련법규

■ 대외무역법(1987.7.제정)

- 외환거래법령이 수출입의 대금결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거래행위 자체를 다루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기업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 및 영수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으며, 경상결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지급방법 신고만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1998.9.16제정)

-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외환거래법에 우선적용
 - 동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66호, 2010.6.10 타법개정)

- 동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③ 주요특징

■ 필요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되, 유사시 안전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외환거래의 원칙적 자유화
 -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negative system)
- 유사시 안전장치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로서 가변예치 의무제,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실시근거 마련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효과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은행 및 시장중심 운영
 -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 대해 등록만 하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거래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환거래 관련 권한의 일부를 위탁

2. 외환자유화 추진계획

① 외환자유화 주요 추진계획

자유화 단계		주요계획
1단계 외환자유화 (`99.4.1)		■ 기업, 금융기관의 대외영업 활동관련 외환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외화차입 및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등 제한을 완화 · 자본거래를 '원칙자유, 예외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 · 대외지급정지, 특정자본거래허가제, 외환집중제 등 유사시 안전장치 도입
2단계 외환자유화 (`01.1.1)		■ 개인의 외화송금거래 등 잔존 외환규제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증여성 송금 등의 지급한도 폐지 단, 고액 대외지급은 한국은행 신고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02.4.20)	제1단계 (`02~`05)	■ 현행제도 기본 틀 유지 및 절차적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거래의 허가제 및 신고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 대외지급 관련 한국은행 신고제도 폐지(`02.7)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한도 확대 -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외화증권발행 한도 상향조정(3천만\$) · 무역거래 관련 다자간 상계허용 등 결제방법 간소화
	제2단계 (`06~`08)	■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규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제 폐지 및 신고(수리)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신용파생거래 등 ·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허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 지정거래은행제 폐지 및 외국환은행의 자본거래에 대한 확인의무 면제
	제3단계 (`09~`11)	■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폐지 · 자본거래 신고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신용파생거래는 신고제 유지 ·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제도 폐지

(계속)

자유화 단계		주요계획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06.5.19)	추진일정 단축 (`1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를 확대(10억원→100억원) · 비거주자의 유사 원화계정 통합 · 원화 수출입한도 상향조정(1만\$→100만\$) ■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단계적으로 자유화 · 대외거래의 절차적 제한 완화 · 자본거래의 절차적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거래 신고 등의 절차를 완화(기재부, 한은→외국환은행 신고) ·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에서 허용하는 금융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 모든 외환거래 허용 ■ 외환시장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포지션 한도완화(전월 자기자본의 30%→50%) 등 금융기관 외환거래 촉진 · 선물거래 외화증거금 허용을 통한 외환시장 활성화 · 외환 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해 외환시장의 선진화 도모
시장친화적 외환시스템 구축방안* (`07.11.18)	추진일정 단축 (`1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지급수단 수출입 자유화 ·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비거주자 채권투자 통합계좌 허용 ■ 제도운용의 관행과 의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거래 증빙서류 간소화, 50만\$이하 채권채권 상계 외국환은행신고로 전환 · 해외여행경비, 해외유학생 및 체제자 지급절차 개선 등 ■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법위 확대 · 금융기관이 업무로 취급하는 장외파생거래 신고 면제 · 외환 포지션 한도 규제 폐지 등 ■ 자본거래 절차적 제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일부거래 제외하고 은행신고 또는 신고면제 · 5만불 이하 거래신고 면제,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 전 10%사전송금 등

* :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 이행계획 잠정유보(`08.10.7)

자료: 한국은행(2010).

② 외국환거래법령의 주요적용 대상

■ 외환자유화 추진계획(`02.4 및 `06.5)의 시행과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05.12)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

- 다만, 외환시장 안정 및 거래질서 유지 등과 관련된 일부항목은 절차적 제한(기재부, 한은, 외국환 은행)만 남아 있음

■ 주요 적용대상

- 원거래(original transactions)
 - 국경간 또는 외화표시 경상거래, 자본거래의 원인거래 또는 행위
- 환거래(forex transactions)
 - 원거래의 당사자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래수단을 주고 받음으로써 거래를 유효하게 성립·완료시키는 행위
- 비거래 항목(non-transactions)
 - 원거래 및 환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항목으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주요 적용대상	남아 있는 외환거래 규제사항
원거래 (original transa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거래는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은행등에 신고만 하면 거래 가능 – 자본거래 신고의 경우도 신고기관(기재부, 한은)에 따라 일부 거래 제약 요인으로 작용(절차적 제한)
환거래 (forex transa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거래, 자본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 및 영수시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신고 필요 –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비거래 항목 (non-transa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만\$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 후 1년 6개월 이내 국내회수 – 1만\$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원화, 외화, 금 등)의 실물을 외국으로 수출, 수입하는 경우 세관신고 필요

자료: 한국은행(2010).

3. 외국인 금융거래 규제사항

■ 비거주자 외국인 금융거래 규제사항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인 비거주자가 국내에게 금융거래를 할 때 외화자금의 송금과 수령, 국내부동산 취득, 원화차입, 파생상품 거래 등 많은 경우 규제를 받음

구 분	주요계획	외국환거래규정
외국인의 자금지급	■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지급가능 · 다만, 입증서류 없이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가능	§제4-4조 (수령은§제4-2조에 따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장 앞 신고	§제9-42조
외국인의 원화차입·대출·증권발행	■ 외국인이 외국환 은행에서 300억원 초과 원화차입은 한국은행 총재 신고 · 비거주자 원화예금은 한국은행총재 신고 · 비거주자의 원화 또는 외화 증권발행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	§제2-6조 §제7-15조 §제7-16조
외국인의 증권취득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 ■ 신고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신고	§제7-32조
외국인의 기타자본거래	■ 기타자본거래는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 계약건당 미화 3천만 달러 이하 물품임대차 계약 · 외항운송업자의 선박이나 항공기 1년 이상 외국통화 표시 임대차 계약 등	§제7-44조 내지 §제7-46조
외국인의 파생상품거래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거주자와의 파생금융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 신고 ·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신고 예외	§제2-10조의 2 제7-40조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 국내 은행의 위안화 업무 취급현황

■ 외국환 거래법령상 위안화 업무 허용범위

- 외국환 거래법령상 예금, 송금, 환전 등에 있어 특정 통화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

거래형태	규제현황
예금	국내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국내에서 은행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것은 완전 자유화(신고면제)되어 있으며, 예금통화에도 제한이 없음
송금	국내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완전 자유화(신고면제)되어 있으며, 송금하는 통화에도 제한이 없음. 다만, 위안화와 같이 국제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통화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외환제도상 은행간 결제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해당통화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환전	국내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위안화를 환전하는 것은 완전자유화(신고면제)되어 있으며, 환전할 수 있는 통화에도 제한이 없음
기타	거주자가 중국의 무역업자와의 거래대금을 위안화로 결제(은행간 결제)하는 것은 국내법상 전혀 제한이 없으나, 중국의 외환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은행별 위안화 업무 취급

- 환전업무는 대부분의 은행이 제한 없이 취급하고 있음
- 예금업무는 외환은행, 우리은행만이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음
- 송금은 위안화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하며, 송금인이 미화로 송금하면 중국 내 은행에서 위안화로 환전하여 수취인 앞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대부분의 은행이 제공하고 있음

Ⅲ. 해외사례¹⁾

1. 중국위안화 국제화

■ ‘위안화 지역화’ 또는 ‘위안화 아시안화(asianalization)’ 도모

- 중국국경 및 주변국을 중심으로 국제결제의 수단으로 위안화 사용확대
 - 중국과 주변국가들간의 무역결제시 위안화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지역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가 거래의 수단으로 정착
 - 홍콩은행들이 위안화 예금, 송금, 외화환전, 신용·직불카드 발급 등의 업무 취급
 - 나아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급속한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국 내부에서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의 공용통화로 격상시켜 지역경제통합을 도모하고 교역효율성을 증진

■ 홍콩은 외환거래 규제 제로지대(zero zone)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최적의 지역

- 미국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혹은 가지고 온 자금으로 홍콩시장에서 투자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이나 부과된 의무 없음
 - 뿐만 아니라 신용만 있으면 홍콩시장에서 들어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 가능

■ 홍콩 역외금융시장 육성추진(위안화 역외금융센터)

- (은행업무 범위의 단계적 확대) 홍콩소재 금융회사가 위안화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홍콩간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된 2004년 1월 이후
 - (1단계 : 2004년 1월) 개인을 주 대상으로 예금, 환전, 송금, 카드업무 등 4개 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업무 허용
 - (2단계 : 2005년 11월) 기존 허용업무의 한도와 허용범위 일부확대
 - (3단계 : 2009년 7월) 홍콩-중국간 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 (위안화 채권발행) 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콩 내 위안화 채권발행을 추진
 - (1단계 : 2007년 7월) 중국계 은행에 한하여 중국정부 승인 이후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허용
 - (2단계 : 2008년 12월) 홍콩의 은행과 기업, 중국계 기업도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발행 허용
 - (3단계 : 2009년 9월) 중국정부국채 발행

1) 해외사례는 특정통화가 해당국경을 넘어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계산단위(unit of account), 지급결제수단(means of payment), 가치저장수단(store of value) 등 화폐로서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화국제화 또는 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정리함.

2. 호주달러 국제화

■ 국제화 추진배경

- 1970년대 들어 영국의 EU가입과 국제농산물 시장의 가격폭락사태 등을 거치면서 국내로부터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
 - 특히, 호주경제가 호황기를 끝내고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호주달러 국제화 추진의 커다란 계기임
 - 그 이전까지는 국내이자율과 고정환율제도를 통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였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함
 - 이로 인해 국제무역과 자본흐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가격변동과 같은 대외적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

■ 변동환율제 도입(1983.12)과 더불어 국제화 진행

- 고정환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장의 외환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로 전환
 - 변동환율제의 도입과 함께 호주 외환시장의 거래규모도 급속히 증가

■ 금융과생상품시장의 발달은 국제화에 크게 기여

- 변동환율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통화스왑시장(currency swap market)과 같은 금융과생상품시장의 발달은 호주달러가 미달러에 비해 수익률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
 - 이는 호주달러의 국제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금리는 호주달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데 큰 기여
 - 통화스왑시장의 발전은 국내와 역외를 잘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호주달러 채권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됨

■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제공

- 호주달러의 국제화는 호주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과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정부가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전환을 유도함
 - 특히 자국 금융시장의 발달과 견실한 경제성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금리는 호주달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함
 - 호주의 경우, 자국통화에 취해진 규제철폐와 국내채권시장의 발전에 의해 호주달러의 국제화가 이루어짐

3. 싱가포르달러 국제화

■ 싱가포르달러 비국제화 정책 : MAS Notice 621(1983~1990년대 후반)

-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 및 경제 불안요인 증대에 따른 우려로 싱가포르는 자국통화 국제화에 대한 반대입장 고수하였음
 - 국제무역 및 순수한 자본이동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래환경을 조성해준 반면, 국내 금융시장내 투기자본 활동만큼은 엄격히 규제
 - 다양한 규제를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싱가포르달러 신용편의를 통제하였으며, 특히, 비거주자의 싱가포르달러표시 파생상품거래를 엄격히 제한

■ 싱가포르달러 국제화 필요성 대두

- 1990년대 후반 실물경제가 더욱 개방되고 금융시장의 성숙을 계기로 싱가포르달러 국제화의 필요성 증대
 - 기업 및 금융부문에서 싱가포르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통화국제화의 필요성이 증대됨

■ 채권시장의 싱가포르달러 국제화 추진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서 싱가포르를 채권시장을 육성해 건설한 자본시장 조성에 노력
 - 정부주도로 싱가포르달러표시 채권시장이 육성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발행자에게 자국통화표시 채권발행 허가

■ 외환시장의 싱가포르달러 국제화 추진

- 싱가포르는 세계 4~5위의 외환시장 규모를 토대로 역외금융시장, 자본시장, 선물시장 등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 역할 수행
 - 2000년 MAS Notice 757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의 싱가포르달러 신용편의에 관한 규제사항을 대폭 제고하고, 비거주자의 싱가포르달러표시 파생상품 거래도 일정한 틀내에서 허용
 - 무엇보다도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아달러시장(asian dollar market)이라는 역외금융시장의 발달에 기인한 것임
- * MAS Notice 757 : 비거주자를 상대로 한 싱가포르달러 신용편의 시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요구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거주자에 대한 싱가포르달러 신용편의 요건관리 규정 완전 자유화함

4. 유로엔 시장

■ 엔화국제화와 더불어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엔화자금에 대한 보유 및 결제수요 증대

- 1990년대 말 이후, 비거주자에 의한 유로엔채의 발행이 크게 확대됨
 - － 유로엔 자금의 원천은 ①해외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엔화표시로 수취하여 해외에서 보유·운용, ②엔화표시 대부 혹은 엔화표시 외채발행 대금의 해외대체, ③유로시장에서 타국통화로부터 엔화의 전환, ④은행의 본·지점 계정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지점으로의 엔화송금, ⑤국내의 비금융기관에 의한 해외송금 등에 따라 생긴 자금임
 - － 거래되는 통화의 종류로는 유로엔 예금, 유로엔 CD, 유로엔 대부(유로통화시장) 등이며, 거래되는 채권의 종류로는 유로엔 채, 유로엔 CP(유로채권시장) 등임

■ 유로엔의 특징 및 시장확대 배경

- 일본이외의 금융기관 및 그 지점에 예치된(혹은 거래되는) 엔화예금 등의 엔화표시 금융자산을 ‘유로엔’이라 지칭하며, 국내거래시 부과되는 각종 규제 및 거래의 관행에서 자유로움
 - － 주요특징으로는 준비예금율의 부과제외, 세제면에서 이자원천과세 적용이 제외되며,
 - － 국제금융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새로운 거래 노하우 취득을 토대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1990년대 말 이후 유로엔 시장확대 배경은 다음과 같음
 - － ① 자유로운 금리설정과 각장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이점
 - － ② 외화의 엔화전환과 유로엔의 국내반입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로엔 시장으로부터 엔화자금 조달의준도가 높아짐
 - － ③ 자국내 단기금융시장 자유화 진전을 토대로 유로엔 시장과 금리채정을 매개로 밀접한 연동관계 구축
 - － ④ 유로엔채 시장에서 채권발행 적격요건의 완화, 국내환류제한의 완화에 따라 발행금액 증가
 - － ⑤ 자국내 금융시장의 일부를 대신하여 우회시장으로서의 역할수행
 - － 결론적으로 유로엔 시장의 발전은 엔화국제화에 수반되는 현상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및 국외의 거래비용의 차이에 기인함

IV. RMB 자유거래제도의 효과

1. 긍정적 효과(위안화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전제)

① 외환거래 비용 절감

■ 환전비용 절감

- 현재 중국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제1의 투자 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구매력 증대와 더불어 역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07년 기준 한국의 수출 중 22.1%, 일본 수출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의 12.6%와 수입의 13.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위안화를 결제화폐로 사용할 경우 환전비용이 절약되며, 교역비중이 커질수록 그 효과 커짐

■ 외환관리비용 절감

- 위안화 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거래비용(환전비용+금융기관 지불비용+관리비용 등)
 - 기업내부에서 외환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 등의 관리비용(in-house cost)절감

② 환율 불확실성 해소

■ 환리스크 해소를 통한 교역 및 투자확대

-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위안화 자유거래를 통해 환율변동이 사라지면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교역 및 투자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계약시점과 자금결제시점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기존 선물시장에서 커버할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하나, 위안화로 통합 시 동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교역이 촉진될 것임
 -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사용할 경우 무역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환율변화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됨
 - 아울러 자본이동면에서 대외적접투자 등 장기자본이동은 환율변동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반면, 단기자본이동은 환리스크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위안화 통합시 단기자본이동은 활성화될 것임

③ 투자환경 개선

■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투자매력도 증가

-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실정
 - 외국인직접투자에 불리한 경영환경이 투자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금융, 외환, 세무, 노사 등 각종 규제에 있어 경쟁국에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각종 거래 및 투자 시 위안화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제의 완화 또는 자유화는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 즉,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위안화 거래가 시범적으로 운용될 경우 해당지역의 투자매력도는 크게 향상될 것임

④ 지역경제통합의 창구역할

■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선순환 구조 조성

- 거래비용과 외환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이익을 증대시킴
 -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위안화 자유거래지역’ 지정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맞물려 한국과 중국의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편익을 창출함

2. 부정적 효과(예상되는 문제점)

① 자본유출(capital flight)

■ 제도상의 허점(loophole) 악용우려

- 위안화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예를 들어 신고의무 없이 위안화 송금이 허용될 경우, 자본유출(capital flight)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차원에서 관련 규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임

② 실효성 미흡 우려

■ ‘위안화 자유거래 지역’ 지정효과 미미

-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여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미미할 경우 제도적 실효성 저하가 우려됨
 - 일반적으로 국가간 거래는 국가마다 다른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어떤 국가의 통화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거래를 하게됨
 - 이로 인해, 다른 통화간의 결제에는 결제시스템 구축,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환율변화 등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거래비용이 발생
 - 이때, 통화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거래비용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실현됨
 - 결론적으로 ‘위안화 자유거래 지역’으로 지정받더라도 위안화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통화량이 적을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미미해 질 수 있음

V. RMB 자유거래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

1. 운영배경 및 필요성

① 지속적인 위안화 위상강화

■ 위안화 공식화 의견 제안

- 2009년 3월 3일부터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화하는 의견 제시
 - 국제금융위기 상황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결제비중 확대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되어 금융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유동성 위기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 역내외 국가들과 통화스왑 체결

- 중국은 세계 1위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체결

일 자	상대국	통화스왑 금액	기능
2008.12.12	한국	위안화 180bn	결제통화, 국제준비통화
2009.1.20	홍콩	위안화 200bn	결제통화, 해외채권발행
2009.2.8	말레이시아	위안화 80bn(3년 기한)	결제통화
2009.3.1	벨라루스	위안화 20bn(3년 기한)	국제준비통화
2009.3.24	인도네시아	위안화 100bn(3년 기한)	결제통화
2009.3.30	아르헨티나	위안화 70bn	결제통화

자료: 중국 인민은행 발표자료.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 중국인민은행의 외환제도 개혁과 화폐 태환성 개선을 위한 외환정책국 신설
- 2008년 8월 텐진 빈하이 신구에 위안화 역외거래시장 개설계획 발표
- 자유로운 태환을 위한 관련 법규정 개정과 외환시장 개혁도 진행

■ 위안화 국제화는 결제통화→지역통화→기축통화의 순으로 단계적 추진

- 결제통화로서의 사용확대는 중국과의 경제교류확대로 나타나는 자연스런 움직임이나, 공식적인 거래허용 등의 제도적 조치 필요
- 지역통화로서의 도약은 중국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위안화의 안정성이 경제적·정치적으로 담보되어야하고, 지역 내 국가들이 위안화를 사용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협력이 필요
- 마지막으로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제적 수요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 체제 내에서 안정적인 관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함

② 필요성

■ 위안화 자유거래 시험적 운용 필요

- 국제통화질서가 달러화 및 유로화의 이원적 구조에서 위안화가 가세할 전망으로 복수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질서 재편의 변화가 예상
 - 실제로 아시아에서 1차적으로 홍콩 및 중화경제권과의 교역 시 위안화사용을 확대하고 이후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속에서 향후 우리와의 교역에서도 위안화 결제확대를 추구할 전망이다
 - 따라서 우리경제도 중국의 기축통화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제한된 지역 내에서 위안화의 시험적 거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단계별 실행방안

① 한·중간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 체결

■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체결

-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FTA 중간단계의 협정인 SECA 방식을 활용
 - 현재, 위안화를 국제화(결제통화→지역통화→기축통화)하려는 중국의 이해와 FDI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나아가 위안화의 환율·금리 등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려는 한국의 이해가 상존함

- 따라서 양국간에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거래 및 투자결제 등을 기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시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양국간 점진적 개방과 경제협력의 대화창구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되, 사전에 '위안화 자유거래'를 선행실험조치(early pilot implementation)수단으로 삼을 것을 對 정부 건의

② 국내은행의 위안화 거래업무 허용

- 위안화 업무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양국간 제도적 보완 및 협력
 - 위안화 송금 시 중국과의 외환제도상 은행간 결제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해당통화로 직접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함
 - 아울러 거주자가 중국 무역업자와의 거래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은 국내법상 제한이 없으나 중국의 외환제도상 허용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시중은행들이 위안화표시 개인예금, 송금, 외화환전, 신용·직불카드 발급 등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국가간 제도적 협력이 우선

③ 외환거래 규제완화 또는 자유화 추진

-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 허용
 - 현재, 외국인인 비거주자가 국내에게 외환자금의 송금과 수령, 국내부동산 취득, 원화차입,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제약(신고와 인허가)이 뒤따름
 - 즉, 외국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규정 자유화 추진
 -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①자금지급, ②국내부동산 취득, ③원화차입·대출·증권발행, ④증권취득, ⑤기타자본거래, ⑥파생상품거래 등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규정 완화 또는 철폐건의

④ 위안화 역외금융센터 유치·운영

- 위안화 역외금융센터유치 잠재력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중국과 지근 거리에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투자국

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역외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

– 다만, 중국과의 무역결제 시 위안화 결제 가능성에 대비하고, 양국간 교류확대 등에 따른 환전과 송금 수요증가 등 실현가능한 것부터 풀어가야 함

■ 위안화 역외금융센터 단계별 육성

- (1단계) : 주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입된 위안화의 유동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안화 예금업무, 위안화 무역신용 대출, 위안화 은행간 대차, 위안화 환매업무 허용
- (2단계) : 위안화 예금금리 개방, 화폐정책금리 형성 등 위안화 금리시장 자유화
- (3단계) : 자본금 계정거래의 점진적 개방·확대
- 기타 : 위안화금융 전문인력 확보, 위안화 금융투자자포럼 개최, 중국투자자들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홍보활동, 위안화금융 담당창구(CNY Banking Window) 개설 등